

특집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 이후, 북한의 대외 정책·관계 변화

북한의 대미 관계 전략 · 김영목

북중 관계와 북한 대외 전략의 변화 · 한홍석

최근 남북한 관계 현황과 대남 정책 전망 · 허문영

북한의 대미 관계 전략

김영목 / 외교통상부 북미과 심의관

최근 북한의 대미 접촉 동향

자보

알려졌다시피, 미국과 북한은 지난 8월 21일~9월 5일간 뉴욕에서 고위급 접촉을 갖고 일련의 상호 조치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은 이 협상 기간 중인 8월 31일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북미간 합의 도출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였으나, 결국 양측은 ① 미사일 문제에 관한 협상의 재개, ② 테러 제재국 명단에서의 삭제를 목표로 하는 실무협의의 개최, ③ 사용후 핵연료봉에 대한 봉인 작업 재개, ④ 1998년도 중유 잔여분의 공급, ⑤ 경수로 사업 공정의 가속화, ⑥ 4자회담의 속개, ⑦ 북한의 지하 시설의 성격 규명을 위한 북미간 논의의 계속 등에 합의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미국은 이와는 별도로 미국내 잉여 밀 30만 톤의 대북한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이 미국과 협상중 일으킨 로켓 발사는 국제 여론을 비등시켰고, 특히 일본의 대북한 입장은 급격히 악화시켜 경수로 재원 분담에 관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이사회 결의안에 서명을 보류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 미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북한의 대규모 지하 시설 문제는 미국 조야의 대북한 인식의 급격한 경화와 행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美 의회, 특히 하원은 북미합의문의 사실상 파기를 초래할 수 있는 KEDO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결국, 美 의회는 미국의 對KEDO 예산을 승인하긴 했지만, 美 행정부에 대해 결코 달성하기 쉽지 않은 조건들을 단계적으로 부과하여, 美 행정부가 북한이 야기하고 있는 여러 안보 상의 문제들을 상당한 정도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놓았다.

또 의회는 美 행정부 사상 처음으로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조정관(North Korea Policy Coordinator)을 임명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美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불신도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하튼 미국 조야가 한반도 문제에 전례없이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된 사실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미국과 북한은 대화와 접촉의 끈을 단절하지 않고 협상을 계속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이면에는 상호 협상과 접촉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이러한 대화 구도 자체를 깨는 것보다는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측의 이러한 접촉 유지와 상호 입장 탐색을 위한 노력은 찰스 카트만(Charles Kartman) 한반도평화회담 담당대사의 11월 평양 방문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북한의 대미 전략

내용이야 어찌됐든 외양 상으로 볼 때, 북한과 미국간의 접촉은 이렇듯 매우 활발해보이고, 미국은 북한이 요구할 때마다 대화에 응하는 것같이 비쳐지기도 한다. 북한이 그간 추진해온 대미 관계는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이(우리보다) 협상은 한번 잘한다”는 자조적인 세간의 평가도 이러한 관점에서 나왔음직하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벌인 협상의 성과는 1994년 10월 제네바 「북미기본합의문」으로 대표된다. 실제로 이 합의문은 북한의 핵 동결과 핵시설 해체를 대가로 하는 경수로와

북한이 그간 추진해온 대미 관계는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이(우리보다) 협상은 한번 잘한다”는 자조적인 세간의 평가도 이러한 관점에서 나왔음직하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벌인 협상의 성과는 1994년 10월 제네바 「북미기본합의문」으로 대표된다. 이 합의문에 따라 미국과 북한간 공식 관계가 조만간 수립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러한 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본다면, 북한의 대미 협상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중유의 재공외에 미국과 북한간 관계 정상화로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합의문에 따라 미국과 북한간 공식 관계가 조만간 수립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러한 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본다면, 북한의 대미 협상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 대해 ‘평화 협정 체결’과 ‘朝·美 관계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이 두 요구는 한반도에서 ‘세력 균형’ 상태를 북한에 유리하게 변동시켜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부언이 필요없을 것이다.

‘조·미 관계 정상화’는 한국이 구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상황에서 균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수세적이고 소박한 목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관계 정상화’ 요구를 ‘조·미간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일체화하여 분석해볼 때에는 북한의 의도가 훨씬 전략적이고 공세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북한의 대미 전략은 미국에 대해서는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간섭치 말거나 한국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청산하고 북측과 협작·연대를 하라는 것이 북한의 요구이며 또 일관된 목표인 것이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을 분리하고 관계를 약화시킴으로써 자신에게 최대한 넓은 행동의 자유(freedom of maneuver)를 확보하겠다는 매우 고전적인 전략인 것이다.

한다.

북한의 이러한 요구는 어디까지나 한국과 미국을 분리시키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킴으로써 북한의 ‘深謀遠慮’ 한 전략 - 북한식 통일 - 을 달성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 포석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평화협정까지 체결되어, 교전 상태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되었으니 이제 북한을 적대시하는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이것은 결코 수세적인 의도에서 출발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남북 대화 요구, 특히 남북 당사자간 해결 주장에 대해 흔히 이러한 대응을 해오고 있다. 즉, “민족 내부 문제는 남북간에 해결해야 하며, 남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민족외적인 문제는 어디까지나 실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풀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런데 민족외적인 문제는 휴전체제와 외군 무력에 관한 것이고, 민족 내부의 문제는 남북간 화해와 단결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 화해가 되려면 먼저 남측이 북한을 적대

시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를 폐기해야 하며, 이러한 화해가 전제되어야만 남북간 대화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외세의 존적 자세를 버리고 민족끼리 대동 단결하자고 나올 때, 남북간 대화와 협작(고려연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¹⁾

달리 말하면, 미국에 대해서는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간섭치 말거나 한국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청산하고 북측과 협작·연대를 하라는 것이 북한의 요구이며 또 일관된 목표인 것이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을 분리하고 관계를 약화시킴으로써 자신에게 최대한 넓은 행동의 자유(freedom of maneuver)를 확보하겠다는 매우 고전적인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대미 전략과 대남 전략을 반드시 한 맥락에서 짚어보아야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북한은 모든 대외 협상에 있어 실질

1) 북한은 1998년 4월 18일 김정일 서한과 김정일의 민족 단결과 평화통일론에 대한 5월 19일 평양방송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강조하였다.

적인 급부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관계를 포함한 거의 모든 대외 관계의 목표가 경제적인 필요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질 정도이고 또 사실이 그렇다.

북한의 입장에서만 볼 때는 핵문제를 일으켜서 1,000 M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2기, 연간 중유 50만 톤의 급부를 보장받았다. 또 미사일 수출 중단 요구에 대해 수억 달러의 보상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지하 의혹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요구에 대해서도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1996년부터 연간 수십만 톤의 석량을 국제 사회로부터 받아오고 있다.²⁾

따라서 북한이 모든 대외 접촉과 거래에서 실질적이고 상당한 급부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對남한·미국·서방** 관계를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제적 이익 추구가 전술적인 목표라면, 한미동맹의 분리와 미국의 대북 적대 자세의 해소를 노리는 것은 전략적 차원의 목표인 것이다.

만일 북한의 경제적 동기가 대외 관계에서의 순수한 목표라면, 북한은 우리와의 공

북한이 모든 대외 접촉과 거래에서 실질적이고 상당한 급부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對남한·미국·서방** 관계를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제적 이익 추구가 전술적인 목표라면, 한미동맹의 분리와 미국의 대북 적대 자세의 해소를 노리는 것은 전략적 차원의 목표인 것이다.

식 대화 재개를 통해 본격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색해야 할 것이고, 일본과도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해 관계 정상화 교섭을 촉진시키는 것이 보다 정상적인 행동인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순리의 코스를 밟지 않거나 최소한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보다 큰 전략적 목표를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지난 8월 31일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것도 북한이 이러한 전략 목표를 계속 갖고 있다는 심증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미국의 **對북한** 정책

미국의 **對북한** 정책은 전반적인 지역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반도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 전략 목표를 여기서 새삼 논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국 정

2) 미국은 임여밀의 공급 약속외에 WFP의 4차에 걸친 appeal에 호응(1차: 200만 달러, 2차: 717만 달러, 3차: 약 17.7만 톤, 4차: 50만 톤)한 바 있다.

미국의 對북한 정책은 전반적인 지역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반도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 전략 목표를 여기서 새삼 논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한반도의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정' 만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판단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면, 정치·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또 동북아의 안정이 급격히 파괴되어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끌고 오게 될 가능성이 높후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정'은 어느 전략 목표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명제'와 같은 것이다.

부가 '한반도의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정' 만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판단때문이다.

우리 국내 일부에서 '한반도 안정'을 앞세우는 미국의 입장을 보고,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미국의 장기적 전략 목표와 현실적 정책을 구분하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수차 한국의 통일에 대한 희망을 밝혀왔다. "비핵화를 수반하는 한반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 통일된 한반도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증진할 것이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전략적 목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 견해이다.³⁾

다만,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면, 정치·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또 동

북아의 안정이 급격히 파괴되어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끌고 오게 될 가능성이 높후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정'은 어느 전략 목표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명제'와 같은 것이다.

미국 정부가 관여 정책

(engagement) 또는 확대 정책(enlargement)을 한반도 정책의 기초로서 북한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간에 공식 관계 수립은 물론 이미 약속한 연락사무소도 개설이 안되고, 제재 해제 분야에서도 큰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 또한 한반도의 안정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정'을 유지하는 데는 '힘의 균형'이 필요 조건이다. 그러나 '힘의 균형'이 안정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진정한 안정은 당사자간에 정치적·군사적 대립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고, '비확산', '대량 살상 무기 포기' 등 국제적인 규범들이 당사자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기초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즉, 당사자와 지역 국가간 신뢰를 증진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부재한 상황에서

3) 미국 정부는 1998년 11월 「21세기에 대비한 美 국가 전략 보고서」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국이 미국의 전략 이익에 부합되며, 미국은 한국의 대북 포용 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북한과의 관계를 증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는 적극적 의미의 '안정'은 도모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미국 조야 일부에서는 단순히 북미 관계의 진전 속도를 늦추라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한 관여

(engagement) 정책 자체를 수정하라는 강경한 요구까지 하고 있는 설정이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약속한 제재 해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도 표시하고 비난도 해왔다. 북한은 1998년에 들어와서는 불만의 강도를 더욱 높여서, "제재 해제 조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미 관계에 대해 근본적 재고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우리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 걸쳐 밝힌 바 있다. '핵동결 파기'의 가능성은 시사한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공개적 입장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양자 관계는 진전보다는 대결의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 정부로서는 의회의 의견과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특히,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입장뿐 아니라 여러 법률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북한이 만일 1994년 제네바합의 당시 당

만일 앞으로 여러 안보상 문제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의외로 북한이 적극적 협조 자세를 보인다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 진전의 속도는 당연히 빨라질 것이다. 북한과 미국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나쁘지 않은 상황, 즉 본격적 해빙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도박적 협상 방식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장에 제재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거나, 또는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계속하면서도 대미 요구가 관철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것은 미국에 대한 이해가 원천적으로 부족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도박적인 협상 방식이 계속 유용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만일 앞으로 여러 안보상 문제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의외로 북한이 적극적 협조 자세를 보인다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 진전의 속도는 당연히 빨라질 것이다. 북한과 미국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나쁘지 않은 상황, 즉 본격적 해빙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도박적 협상 방식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미국 조야는 물론 그리고 한국, 일본 등 우방들에 대해 수용될 수 있는지는 매우 불투명하다.⁴⁾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한국특별팀(Korea Task

4) 최근 美 공화당계 보수 인사들은 북한이 일으키는 문제에 보상을 주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침략 의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남북 대화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에는 행정부와 의회가 공히 동의하고 있다. 美 의회가 특별히 남북 대화의 진전을 美 행정부가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배려인 동시에, 북한이 남북 대화를 계속 무시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는 현실적 인식이기도 하다. 남북 대화가 진전되어야 '진정한 안정'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데, 북한이 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Force)에는 한반도 문제에 정통하고 특히 관심이 많은 유수한 전직 관리와 학자들이 초당파적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이 팀은 정기적으로 회합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논의해오고 있다.

이 팀은 지난 10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지하 시설 문제로 미국 내가 떠들썩해진 분위기에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공개 서한을 채택했다. 동시에 글자는 현재의 북미합의문 구도, 즉 북한에 대한 관여는 계속되어야 하되, 북한의 핵동결 의무가 확인되어야 하고 미사일 수출·개발 등의 중단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다 큰 채찍과 보다 큰 당근'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미국 조약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고, 결국 美 의회는 하원의 삭감 결의 등 우여곡절 끝에 KEDO에 대한 예산 3,500만 달리를 승인했다. 그러나 의회는 한

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 남북 대화, 지하 의혹 시설의 확인,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 등 여러 분야에서의 진전을 예산 지출의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남북 대화와의 관계

남북 대화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에는 행정부와 의회가 공히 동의하고 있다. 美 의회가 특별히 남북 대화의 진전을 美 행정부가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배려인 동시에, 북한이 남북 대화를 계속 무시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는 현실적 인식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의 딜레마이기도 한 남북 대화의 추진 문제는 미국 정부로서도 어려운 과제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남북 대화가 진전되어야 '진정한 안정'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데, 북한이 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정부가 남북 대화를 촉구하면서 4者회담의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안정'을 위한 플러스 알파(plus α)를 도모해가면서, 결국 북한이 남북 대화를 외면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해보고자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햇볕론으로 대변되는 새 정부의 포용 정책에 대해 미국이 지지를 표하고,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은 한미 양국이 장기적 목표와 현실적 대안

에 대해 같은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우리에 대해서는 외세 의존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미국과 여타 서방국으로부터도 끊임없이 지원을 모색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교류나 결령 결령' 하는 대화는 안한다고 하면서, 민간 기업의 투자는 대환영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의 포용·대화 정책이 그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이가 바로 이러한 북한의 약점과 모순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서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한미 분리 전술, 자기 생존 목표를 위한 전략, 진정한 의미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거부 반응 등을 여하히 극복해야 하느냐가 당면한 큰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장차 남북간 관계와 관련하여 심사숙고해보아야 할 문제다.

북한이 대미 정책과 대남 정책을 하나의 논리적 틀에서 설정해놓고 우리와의 대화에는 수락할 수 없는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은

북한이 대미 정책과 대남 정책을 하나의 논리적 틀에서 설정해놓고 우리와의 대화에는 수락할 수 없는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은 북한 나름대로의 전술이다. 그러나 북한의 그러한 전술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다. 미국도 남북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과의 거래를 무한정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북한 스스로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이득을 계속 모색하고 있어 대남·대미 관계에서의 비중을 바꿔보려 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나름대로의 전술이다. 그러나 북한의 그러한 전술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다. 미국도 남북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과의 거래를 무한정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북한 스스로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이득을 계속 모색하고 있어 대남·대미 관계에서의 비중을 바꿔보려 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정책이 이러한 관여 정책을 통해 북한을 변모시켜나가는 것이라면 미국을 위시한 국제 사회의 북한 변화 노력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에 엄존하는 사고와 행동 양식의 괴리를 한숨에 극복할 수 있다는 성급함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미 공동 보조 등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모색하면서도 당사자로서 발휘할 수 있는 책임성과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❸